

# 이 대통령 “수도권과 불균형”… 추경 지방 우선 지원 강조

불균형 확대시 경제 안정성 하락  
민생·기업들 피해 최소화 지시  
“경제 전시 상황” 신속 편성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빠르게 설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8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전반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가 생명”이라며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전쟁 추경’인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공직자가 밤잠을 설쳐가

며 애쓰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히

준하게 기울여나가야 한다”며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급 조달 확대, 또 지방 주도 R&D(연구개발)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 민생 경제와 이에 덧붙여서 투자와 연구, 교육 분야에 걸쳐서 지방 우선 원칙,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유 공급 약속을 받아 온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격려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급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이자,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 공급선을 개척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런 시기에 강 실장이 큰 성과를 거뒀다.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또 “비행 중에 피해를 볼까 걱정했는데 잘 다녀오셨다. 표창이라도 하나 드려야 하겠냐”라며 웃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이정부 경사노위 출범… 일자리 대응 논의

노사정, ‘노사적 공동선언’ 발표  
의제 맞는 본위원회 17명으로 구성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다시 가동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8년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은 앞으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오전 청와대 총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 재개를 넘어 ‘사회적 대화 2.0’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사회적 대화 중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시스템 재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의제와 최종심의 의결을 맡는 본위원회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한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노동계 위원 4명, 경영계 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정부 측 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7년간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1개의 특별위원회와 5개의 의제별위원회, 1개의 업종별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에서 각종 노동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등이 지난 2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리 양극화 해소 등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위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 중인 ‘65세 정년연장’은 직접적인 의제로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정년연장 논의가 해법을 설계하는 형태의 논의 과정이라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인구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조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자리”라며 “논의의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의제별위원회로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발전 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위원회가 운영된다.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AI다. 최근 들어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등으로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 지원, 일자

리 변화 대응, 노사 협력 모델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별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업종별 위원회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위원회’가 발족된다. 석유화학산업 불황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여수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다른 지역 특화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우수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 직후에는 이 대통령이 참여한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가 진행됐다. 현직 대통령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하는 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노동과 기업의 시각으로 본 양극화 진단 및 해소 방안을 발표했고, 이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서예진 기자

## 당정 “플라스틱 공급·가격 안정 필요”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중동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비용으로 번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조달청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원유 공급 불안으로 화학 기초소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가공해 플라스틱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대기업인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들은 나프타로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최근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합성수지 공

급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간담회 취지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합성수지를 공급받지만 납품업체는 인상된 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모든 손실을 플라스틱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플라스틱 제조기업은 원가의 80%가 원재료”라며 “원가 급등과 납품단가 미반영 사이에서 이른바 ‘샌드위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채정목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전쟁 이후 1톤(t)당 20만원 수준의 가격 인상과 함께 공급 물량 조정이 이뤄졌고, 추가 인상과 공급 중단 가능성까지 통보받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플라스틱 공급 안정 ▲가격 급등 방지 ▲원자재 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 /뉴시스

## “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혁신 추진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본시장을 혁신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신뢰·주주 보호·혁신·시장 접근성의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조적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운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다. 이제는 그 가능성이 실현으로 이행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이 원인으로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오늘 민주당 정부 위원들과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 정상화와 민생 금융 지원

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또 “저평가 주가를 정상화하고,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을 엄단하며, 쪼개기 상장과 중복 상장으로 일반주주의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도 바로잡겠다”며 “아울러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통해 우량 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장기 투자 기반도 두텁게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겠다”며 “우리는 이미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정상화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공정한 합병거래 산정과 의무공개대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